

BIS 비율 조직적 조작 정황 포착

(국제결제은행)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

정부·금융감독원·외환은행 개입 의혹 매각 관련 검은돈 유통 전담여부 조사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돼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매각을 한달여 앞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된 '의문의 팩스'에 대해 은행 고위층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은행측과 정부 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 실무자로부터 당시 BIS비율을 허위 보고하라는 윌선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헐값 매각에 정부, 금융감독당국, 외환은행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일부 드러남에 따라 '검은돈'이 어느까지 닿았는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위층도 조작에 참여= 대검찰청은 10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 상무를 지낸 전용준씨가 (BIS 비율이 포함된) 팩스 5장의 발송과 관련해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씨는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은행 매각작업을 위해 구성된 TF의 진두 지휘자로 알려져 있어 헐값 매각의 의혹을 풀 어줄 핵심인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아울러 전씨가 BIS비율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당초 팩스 발송자로 알려졌던 허모 차장(지난해 사망)의 독자적인 조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부 밝혀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대검은 "전씨가 당시 매각작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매각작업에 관계했던 외환은행 관계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당위성을 제공했던 BIS비율이 은행 고위층에 의해 고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향후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은행 고위층의 개입과 금품 수수가 일부 드러났다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향후 수사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감사원이 금감원 간부

가 BIS비율에 대해 담당 실무자에게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전방에 무게를 실었다.

감사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감사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작 개입 범위에 촉각=당초 금감원으로 송부된 팩스의 작성자는 지난해 8월 간질환으로 사망한 외환은

행 재무팀 허모 차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당시 매각 TF 팀장이었던 전씨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시 매각의 결정적인 판단근거가 됐던 BIS 비율이 조직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상고 출신으로 10년간 전산을 담당해 은행의 재무에 가장 밝았던 것으로 알려진 허 차장이 상부 지시에 의해 '적절한' BIS 비율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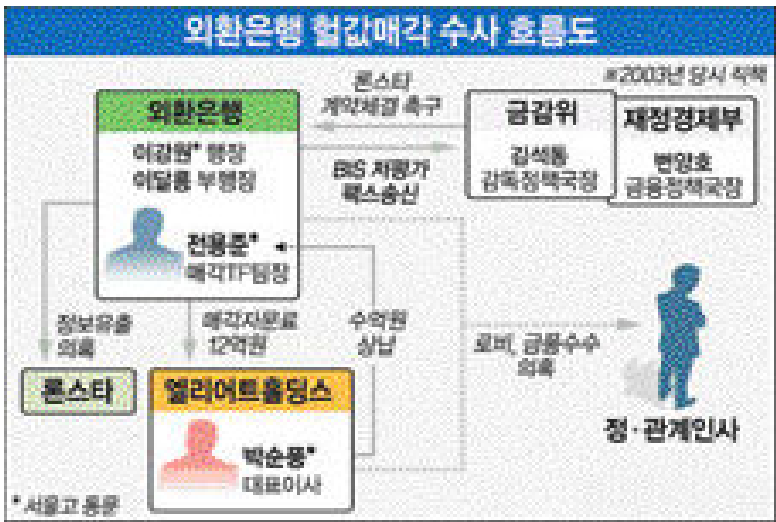
이와 관련, 외환은행 전직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당시 6%대 시나리오는 은행내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몬스타에 매각되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BIS 비율은 8~9%대를 오갔다"며 "어떤 식으로 부실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외환카드 부실을 감안해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F팀장이 조작에 개입했다면 이는 행정 등 은행 고위층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고, 재정경제부나 금감원의 담당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진민기자 cki@kwangju.co.kr



10일 오전 몬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과 관련, 박순풍(왼쪽) 매각 자문사 대표와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용준씨(오른쪽)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 우리한테만 날 세우나”

현대차 수사 형평성 논란...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삼성, 두산, SK, 현대차 등 기업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달라, 기업에 따라 검찰의 '잣대'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검찰의 칼날을 받고 있는 현대차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검찰은 현대차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대량 가져 갔고, 정몽구 회장 부자(父子)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펴고 있다.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도 임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수사한 삼성과 두산그룹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불구속기소 처분했

다. 특히 삼성에 대한 수사와 현대차 수사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돌연 출국 후 검찰의 계속되는 '압박'에 따라 지난 8일 귀국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이 아니라 밝혀 피의자임을 언론중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는 삼성 이강희 회장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도청사건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종결된 올 2월에야 귀국했지만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당시 언론에 이 회장 소환은 물론 귀국 시기 등을 일일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어차피 사건의 본류가 삼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인 이유로 삼았다.

아울러 대한 수사가 달랐다. 검찰은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구속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 씨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03년 말 고용 임원 2명만 기소하면서 통상 언론에 알려지는 공소장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 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검찰 수사에 맞설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세계적 업체 급성장 현대차 검찰 수사에 사업차질 위기”

美 월스트리트저널 “중대한 시기에 리더십 위협”

비자금 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이제 막 세계 자동차업체의 '빅리그'에 진입하려는 현대차와 그 관계자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기사를 통해 지난 2주간 검찰의 압수수색 등 현대차그룹에 대한 일련의 수사진행 상황을 전하면서 현대차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20년전 현대차가 미국에 단순한 저가차량으로 처음 미국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낮은 품질 문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지만 정 회장 취임 이후 품질 중시 경영을 통해 현대차가 미국시장의 베스트셀링카인 도요타 캠리에 견줄 만한 평판을 소비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현대차는 오는 2010년까지 생산량 기준 세계 5위

업체가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왔고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비(非)고급차부문 품질에서 현대차를 혼다나 닛산, 시보레, 포드, 크라이슬러보다 높은 3위로 평가했다. 신문은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 걱정하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현대차의 이런 기세에 (관을 덮는 보자기인) '관보'(Pall)가 드리워진 것으로 비유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범국민 개헌특위 구성하자” 양형일의원 대정부질의서 제안

10일 열린 임시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서에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이 '범국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개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87년 장기집권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했던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범국민 개헌 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기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개헌 일정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FTA 협상과 관련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로부터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최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받도록 협상 전략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he advertisement for 'Jangsu Myeon' (장수면)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noodle package. The main headline reads "人間的 꿈은 건강장수" (Human dream is health and longevity) and "건강 장수면 탄생!" (Healthy longevity noodles born!). Below the headline, it says "맛 좋고 안전합니다." (Tasty and safe). The ad also includes a list of ingredients and nutritional information.